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담당 : 이조은 간사 02-723-5036 labor@pspd.org)
제 목 [보도자료] 참여연대「광역지방정부의 노동행정 현황과 과제」이슈리포트 발표
날 짜 2019. 04. 04. (총 4 쪽)

보 도 자 료

참여연대, 「광역지방정부의 노동행정 현황과 과제」 이슈리포트 발표

- 지역주도 노동조례 제정·종합적인 노동권익기관 설치·노동예산 증가 등 일부 광역지방정부 노동행정의 긍정적 변화 확인
- 노동행정 예산과 노동담당 행정조직 비중은 매우 낮은 실정
- 노조할권리 지원 확대,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노동 거버넌스 체계 강화, 노동행정 예산 비중 제고 등 노동행정 개선방안 제안

1.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오늘(4/4) 전국광역지방정부 노동행정 실태를 확인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노동친화적 가치가 지방정부 노동행정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광역지방정부의 노동행정 현황과 과제」 이슈리포트를 발표하였다.
2. 참여연대는 광역지방정부의 노동행정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019.1.16. 전국 17개 광역지방정부에 정보공개 청구하여 2월 중 수령한 노동행정 자료를 △노동행정 조례 △노동행정 예산 및 담당부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동권익기관 △노동 거버넌스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장애인 등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 조례·노사민정협의회 조례 등 광역지방정부 노동조례 다수는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라 제정되었으나, 최근에는 지역 차원의 소득 불평등 해소 정책인 생활임금 조례가 상당수 광역지방정부에 제정(17곳 중 12곳)되었고, 중장기적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조례(6곳 제정), 새로운 노동거버넌스인 노동이사제 관련 조례(4곳 제정) 등 광역지방정부가 주도하여 제정한 조례가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적은 수이지만 서울노동권익센터, 경기도노동권익센터와 같은 종합적인 노동권익기관이 광역지방정부 주도로 설치된 것을 확인하였으며, 2019년 광역지방정부의 세출 예산액 대비 노동부문 예산이 2018년에 비해 21.8%(9,571백만원)증가하고, 지역 노동 거버넌스인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2019년 예산이 2018년 대비 40.1%(39백만원) 증가하였다. 이러한 점은 광역지방정부의 노동행정이 점차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광역지방정부의 2019년 세출총액 대비 노동부문 예산은 0.58%(53,575백만원), 노동담당 행정조직의 비중은 본청 내 전체근무 인원 대비 0.5%(22.6명)에 불과할 정도로 광역지방정부의 ‘노동행정 예산과 노동담당 행정조직’ 비중은 여전히 매우 낮은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3. 참여연대는 광역지방정부 노동행정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고용·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노동자 지원’에 집중된 노동정책 범주를 ‘노조활동권리 지원(노동조합 교육 및 시설 지원 지역 거버넌스에 노동조직 참여 확대, 종합적인 노동권익기관 설치 등)’으로 확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노동조례 제정 및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지역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 광역지방정부 산하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등 노동 거버넌스 체계 강화 △노동행정 예산과 노동담당 행정조직 비중 제고 등을 제안하였다. 한편 참여연대는, 중앙정부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만들고 지역정부는 노동자들의 적정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생활임금을 추진한 것처럼, 중앙정부는 기본적인 노동행정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광역지방정부는 각 지역 상황과 여력에 따라 중앙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상회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상호보완적 노동행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광역지방정부의 노동행정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계획임을 밝혔다. 끝.

◎ [이슈리포트](#) [\[원문보기/다운로드\]](#)

◎ 별첨: 「광역지방정부의 노동행정 현황과 과제」 이슈리포트 요약본

1. 보고서의 취지

- 한국 사회의 1인당 연평균 노동시간은 2,024시간(2017년 기준 OECD 3위)으로 장시간 노동이 일상화되어 있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율은 40.9%으로 매우 높으며,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은 59.3%으로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가 매우 큼. 이렇듯 한국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장시간·불안정·불평등 등의 특성을 가지며 총체적으로 열악하다고 볼 수 있음.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고용형태가 다양해지고 불안정해지는 등 빠르게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노동정책이 요구됨.
- 한국 사회의 노동행정은 중앙정부(고용노동부)가 주도하여 기획·집행하는 중앙집중-정부주도적 성격을 지님. 한국 사회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노동행정과 함께, 중앙정부 노동행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역노동행정이 요구됨. 특히 지방정부는 많은 수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용자로서 모범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도 있음.
- 이와 같이 지방정부 노동행정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일부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춰 주도적인 노동행정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참여연대는 「광역지방정부의 노동행정 방향과 과제」보고서를 통해 전국 광역지방정부 노동행정의 실태를 확인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노동자 권익보호, 노동기본권 보장 기반 구축, 고용의 질 개선, 노동존중문화 확산’과 같은 노동친화적 가치가 지방정부 노동행정에 반영되는 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광역지방정부의 노동행정 변화 현황

- 광역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라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장애인 등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 조례,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등의 노동행정 조례를 제정하고 노동권익기관으로 노동복지시설을 운영해왔음.
- 광역지방정부의 2019년 세출총액 대비 노동부문 예산은 0.58%(53,575백만 원), 노동담당 행정조직의 비중은 본청 내 전체근무 인원 대비 0.5%(22.6명)에 불과할 정도로 ‘노동행정 예산과 노동담당 행정조직’ 비중은 상당히 낮았음. 이러한 점을 살펴봤을 때 광역지방정부 행정에서의 노동행정 비중은 매우 낮은 실정이라고 할 수 있음.
- 한편 지역 차원의 소득 불평등 해소 정책인 생활임금 조례가 상당수 광역지방정부에 제정(17곳 중 12곳)되었고, 중장기적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조례(6곳 제정), 새로운 노동거버넌스인 노동이사제 관련 조례(4곳 제정) 등 지역 주도로 노동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광역지방정부가 증가하는 경향과, 적은 수이지만 서울노동권익센터, 경기도노동권익센터와 같은 종합적인 노동권익기관이 광역지방정부 주도로 설치된 것을 확인하였음. 또한, 2019년 광역지방정부의 세출 예산액 대비 노동부문 예산이 2018년에 비해 21.8%(9,571백만 원)증가하고, 지역 노동 거버넌스인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2019년 예산이 2018년 대비 40.1%(38,697천 원) 증가하였음. 이러한 점은 광역지방정부의 노동행정이 점차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줌.

3. 광역지방정부 노동행정 개선을 위한 제언 : 광역지방정부의 노동행정 비중확대와 거버넌스 변화

- 광역지방정부는 노동문제 해결 주체인 노동조합의 조직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고용·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노동자 지원’에 집중된 노동정책 범주를 ‘노조할권리 지원(노동조합 교육 및 시설 지원, 지역 거버넌스에 노동조직 참여 확대, 종합적인 노동권익기관 설치 등)’으로 확대해야 함. 또한, 제도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넘어 제도를 만드는 과정에 지역 주체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 광역지방정부 산하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등 노동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이러한 노동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하기 위하여 노동행정 예산과 노동담당 행정조직’ 비중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광역지역정부는 중앙정부의 노동정책 집행과 함께 주도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춘 노동행정을 기획하고 집행해야 함. 중앙정부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만들고 지역정부는 노동자들의 적정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생활임금을 추진한 것처럼, 중앙정부는 기본적인 노동행정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광역지방정부는 각 지역 상황과 여력에 따라 중앙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상회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상호보완적 노동행정이 이뤄질 수 있음.
- ‘노동자 권익보호, 노동기본권 보장 기반 구축, 고용의 질 개선, 노동존중문화 확산’과 같은 노동친화적 가치가 지방정부 노동행정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접촉면이 넓다고 할 수 있는 광역지방정부 행정에서 노동행정의 비중이 커져야 함. 서울특별시 등 일부 광역지방정부의 모범적인 노동행정 사례를 참고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노동조례 제정 및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노동 예산 및 전담부서 확대, △노조할권리 지원 확대, △노동거버넌스 활성화와 같은 지역정부 주도의 체계적인 노동정책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함.